

# 코로나19가 중국 경제 및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부 대책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중국

박석진 (중국 칭화대학교 역사학 박사과정)

## ■ 머리말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거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WHO가 2020년 4월 6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 및 지역에서 1,136,85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해 62,955명이 사망했다.<sup>1)</sup> 초기에는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이 강력한 전염병은 국제적으로 교류가 활발하고 경제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들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유례없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인류 인구 78억 명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30억 명 정도가 이동이 제한되고 있고, 많은 국가의 경제활동이 마비 수준에 이르자 전 세계적인 '대공황'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각국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동원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고 미국 정부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2조 2천억 달러(약 2,700조 원)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sup>2)</sup> 4월 5일 현재 확진자 82,930명, 사망자 3,338명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sup>3)</sup>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조치로 도시 봉쇄, 대부분의 기업 및 상점들의 영업 중단,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이동 제한, 대중교통 운

1)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

2) 연합뉴스(2020.3.26),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2만 명 넘어...곳곳에 임시 영안실(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6030551009?input=1195m>

3) [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situation-reports/20200405-sitrep-76-covid-19.pdf?sfvrsn=6ecf0977\\_2](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situation-reports/20200405-sitrep-76-covid-19.pdf?sfvrsn=6ecf0977_2)

행 중단, 모든 학교의 방학 연장 등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러한 강력한 방역 조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 및 노동자들을 포함한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 경제 및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살펴볼 것이다.

## ■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끼친 영향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3월 27일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sup>4)</sup>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1~2월 두 달 동안 일정 규모 이상 공업기업<sup>5)</sup>의 이익은 인민폐 총4,10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8.8% 하락했고 영업 수익은 11조 6,2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7.7%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경제 상황의 구체적인 원인을 국가통계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sup>6)</sup> 첫째, 공업 생산 매출이 현저히 하락했다.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춘절(설) 연휴를 3일 연장했고 20개 이상의 지역에서 업무 복귀 시한을 10일 연장했다. 이로 인해 설 연휴 이후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재개가 늦어졌고, 2월에 생산을 재개한 이후에도 각종 제약으로 인해 여전히 생산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했다. 그 결과 기업의 생산 매출이 현저히 하락해서, 1~2월 일정 규모 이상 공업의 부가가치는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13.5% 하락했다. 둘째, 원가 상승으로 이익이 하락했다. 방역 기간 생산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했지만 임금, 감가상각 등과 같은 고정비용은 감소하지 않았고 방역 비용은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에 원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대부분의 업종에서 이익이 하락했다. 1~2월 41개 공업 업종 중에서 37개의 업종에서 이익이 하락했는데, 그중 전자, 자동차, 전기기계, 화학 공업 등과 같은 주요 업종에서 각각 87.0%, 79.6%, 68.2%, 66.4% 하락했다.

4) [http://www.stats.gov.cn/tjsj/zxfb/202003/t20200327\\_1735114.html](http://www.stats.gov.cn/tjsj/zxfb/202003/t20200327_1735114.html)

5) 중국에서는 연간 주요 사업 수익이 2천만 위안 이상인 공업기업을 '일정 규모 이상 공업기업'이라고 범주화한다.

6) [http://www.stats.gov.cn/tjsj/sjcd/202003/t20200327\\_1735115.html](http://www.stats.gov.cn/tjsj/sjcd/202003/t20200327_1735115.html)

또한 국가통계국은 1~2월의 전체 경제 상황을 총결했는데, 그중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sup>7)</sup> 첫째, 전반적으로 공업 생산이 감소했지만 일부 물자는 생산이 증가했다. 공업 생산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마스크와 같은 의료 방호 물자와 소독용 알콜, 냉동 육류, 라면 등과 같은 생활필수품은 생산이 증가했다. 둘째, 서비스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다. 1~2월 전국의 서비스업 지수는 전년대비 13.0% 하락했다. 셋째, 시장 매출이 감소했다. 1~2월 소비재 총 소매 판매량은 5,21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0.5% 감소했는데, 그중 요식업 수익이 43.1%, 소매 상품 매출이 17.6% 감소했다. 넷째, 고정자산 투자가 축소됐다. 1~2월의 전국 고정자산 투자(농업 제외)는 3조3,32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4.5% 하락했다. 다섯째, 실업률이 다소 상승했다. 2월 전국 도시 실업률은 6.2%, 31개 대도시 실업률은 5.7%를 기록했다. 여섯째, 수출입 총액이 감소했고 수출입 무역에서 적자가 발생했다. 1~2월 화물 수출입 총액은 4조1,23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9.6% 하락했는데, 이 중 수출은 2조 406억 위안으로 15.9% 하락했고 수입은 2조 832억 위안으로 2.4% 하락해 426억 위안 적자를 기록했다.

## ■ 코로나19가 중국 기업에 미친 영향 및 정부 대책

코로나19가 중국의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20년 2월 99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칭화대와 베이징대 교수들이 합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다.<sup>8)</sup>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기업 중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한 항목에서 34%의 기업이 1개월 이내라고 응답했고 33.1%는 2개월, 17.91%는 3개월이라고 응답했다. 6개월 이상 지속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9.96%에 불과했다. 코로나19가 2020년 영업 수익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29.58%의 기업이 5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28.47%는 20~50%, 17%는 10~20%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단지 4.02%의 기업

7) [http://www.stats.gov.cn/tjsj/zxfb/202003/t20200316\\_1732232.html](http://www.stats.gov.cn/tjsj/zxfb/202003/t20200316_1732232.html)

8) 新浪財經(2020.2.5), 「獨家|清華、北大聯合調研995家中小企業, 如何穿越3個月的生死火線」, <http://finance.sina.com.cn/wm/2020-02-05/doc-iimxxste9003599.shtml>

만이 10%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지출해야 할 부담 중 가장 큰 것으로 62.78%의 기업이 직원 임금과 사회보험료를 꼽았고 그다음으로 13.98%가 대출금 상환, 13.68%가 임대료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현금 부족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22.43%의 기업이 ‘감원 및 임금 삭감’이라고 응답했고, 21.23%는 대출, 16.2%는 휴업, 13.58%는 현 주주의 증자(增資)라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는 50.2%의 기업이 임대료, 임금,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라고 답했고, 21.33%는 조세 감면, 12.48%는 유동성 지원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상황에 국무원 산하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기업에서 대규모 감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기업의 사회보험료 감면 혹은 납부 연기, 실업보험료 반환, 일자리 안정화 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기업의 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감면하는 정책은 총 5천억 위안 이상 규모에 이르고, 의료보험료도 단계적으로 감면해 기업들이 최대 1,500억 위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3천억 위안 규모의 코로나19 특별 대출 기금을 마련했고 기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3천억 위안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통해 개별 공상업주들을 지원하도록 했다.<sup>9)</sup>

베이징시(北京市), 상하이시(上海市), 광둥성(廣東省) 등 31개 지역의 지방정부도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기업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베이징시 정부는 기업의 방역 물자 보장, 원재료의 원활한 공급, 물류의 원활한 운수 등을 포함하는 대책을 2020년 2월 3일 발표했다. 이 대책은 기업이 유연한 고용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한 기업이 연내 휴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과 같은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이 코로나19로 생산과 경영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는 직원들과 상의해 임금 조정, 교대근무 실시, 근로시간 단축, 대기발령 등의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안정화하고 최대한 감원을 실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광둥성 정부는 2020년 2월 6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업 생산 재개에 관한 조치」를 발표했다.<sup>10)</sup> 상하이시 정부는 실업보험의 일자리 안정 환급정책 실시, 사회보험 납부 표준 조정 연

9) 新華網(2020.3.4), 「疫情之下給降薪、被裁員? 國家出手穩就業、穩工資」, [http://www.xinhuanet.com/fortune/2020-03/04/c\\_1125659093.htm](http://www.xinhuanet.com/fortune/2020-03/04/c_1125659093.htm)

10) 中國財經(2020.2.13), 「31省份支持企業“抗疫”政策出台 減稅降費多項措施助力復工復產」, <http://finance.china.com.cn/news/20200213/5192436.shtml>

기, 사회보험 납부 기간 연장, 직업훈련 비용 보조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그중 실업보험 환급 정책은 감원을 하지 않거나 감원을 최소화한 기업에 지난해 실제로 납부한 실업보험료 총액의 50%를 환급해주는 정책인데, 이 정책을 통해 약 14만 개의 기업이 약 26억 위안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보험 납부 회계연도를 3개월 연기하면서 사회보험료 요율 인상을 그만큼 연기하도록 했다. 그 결과 기업의 부담을 약 101억 위안 경감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sup>11)</sup> 광둥성 정부는 기업의 생산 재개를 위해 기업의 고용 비용 경감, 경영 부담 경감, 재정금융 지원 강화, 정부서비스 강화 등과 같은 대책을 내놴다. 기업의 고용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코로나19 방역 기간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기했고, 상하이시와 유사한 실업보험 환급정책을 채택했다. 그리고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되거나 치료받는 기간 기업이 지급한 임금은 해당 노동자의 연금보험 납부 임금지수(전년도 평균 월소득)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업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방역 기간 동안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세금 납부를 3개월 연기할 수 있도록 했고, 세금 납부가 어려운 기업에는 부동산보유세, 토지사용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또 국유자산 유형의 사무실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기간의 첫 번째 달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달은 50% 감면하기로 했다. 기업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상환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낮추거나 감면해주도록 권고했다.<sup>12)</sup> 선전시(深圳市) 정부는 2020년 2월 7일 도시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 지원, 기업 안정을 위한 현금 유통 지원, 부동산 임대료 감면, 기업의 금융비용 감면을 포함하는 정책을 내놴다. 또한 각 기업의 감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 기간 내 감원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한 기업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실업보험 비용의 50% 및 사회보험 비용의 25%를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sup>13)</sup>

이 외에 이번 코로나19로 특히 큰 피해를 입은 우한시(武漢市) 정부도 2020년 3월 25일

11) 新華網(2020.2.4), 「上海: 出台企業減負政策, 保障企業正常經營秩序」,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20-02/04/c\\_1125528321.htm](http://www.xinhuanet.com/politics/2020-02/04/c_1125528321.htm)

12) [http://www.gd.gov.cn/gdywdt/gdyw/content/post\\_2886230.html](http://www.gd.gov.cn/gdywdt/gdyw/content/post_2886230.html)

13) 中國財經(2020.2.13), 「31省份支持企業“抗疫”政策出台 減稅降費多項措施助力復工復產」, <http://finance.china.com.cn/news/20200213/5192436.shtml>

조업 재개와 안정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발표했다.<sup>14)</sup> 이 정책은 크게 자금 지원 확대, 기업 비용 절감, 금융 지원 강화, 기업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0억 위안 규모의 특별구조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에 1년 만기 무이자 대출을 제공한다. 그리고 감원 비율이 5.5% 이하인 기업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실업보험료의 70%를 환급하고, 보험 가입 직원이 500인 이하인 기업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실업보험료의 50%를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춘절기간 조업을 지속하고 긴급 의료물자를 배송한 기업에는 1인당 2천 위안의 일회성 취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취업알선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1인당 6백 위안에서 1천 위안으로 인상한다. 대학생 인턴을 2개월 이상 수용하는 기업에는 1인당 1천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다른 지방 정부와 마찬가지로 기업에 대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 사회보험 납부기한 연장, 전기, 가스 등 각종 공과금 10% 인하 및 납부기한 연장 등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 ■ 코로나19가 중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부 대책

국가통계국의 통계에 의하면,<sup>15)</sup> 2020년 1월과 2월 중국 전국적으로 실업률은 각각 5.3%와 6.2%로 전월대비 각각 0.1%p, 0.9%p 상승했다. 1월의 실업률은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의 영향으로 약간 상승한 것이고 2월의 실업률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이 조업을 멈추고 고용 인원을 감축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도소매업, 숙박업, 요식업, 교통운수업, 문화 체육 관련 업종 등과 같은 서비스업의 취업 인원 감소가 비교적 두드러졌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농민공의 취업안정성도 낮아졌고 불안정 노동자들의 비중이 증가했다. 그리고 일부는 취업에 대한 의지가 낮아져 취업을 원하지 않거나 취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일정 기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14) <http://fgw.wuhan.gov.cn/portal/article/index/cid/12/id/13103.html>

15) [http://www.stats.gov.cn/tjsj/sjjd/202003/t20200316\\_1732415.html](http://www.stats.gov.cn/tjsj/sjjd/202003/t20200316_1732415.html)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해왔다. 먼저 1월 24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코로나19 방역 기간 중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보장함으로써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사항을 발표했다.<sup>16)</sup> 노동자가 정부의 방역 조치로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노동 계약을 종료할 수 없도록 했고 코로나19 방역 기간 동안 노동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정부의 방역 긴급 조치가 끝나는 시기까지 노동계약이 연장되도록 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 경영이 곤란해진 경우 노동자들과 협의해 최대한 감원을 피하도록 했고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는 일자리 안정화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한 임금 주기 내에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도록 했고 한 임금 지급 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업이 노동자에게 일정 정도의 생활비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어 2월 5일에는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교육부, 재정부, 교통운수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합동으로 조업 재개 관련 농민공의 취업에 관한 일련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는 각 기업들에 조업 재개를 원활히 준비하도록 일련의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업의 안정적인 노동력 수급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뿐만 아니라 후베이성이나 우한시(武漢市)처럼 코로나19 피해가 특히 심각했던 지역에서 오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기업이 거부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보험의 일자리 안정 환급정책 감원율 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후 지난 3월 20일 국무원은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실시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면서 종합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제시했다.<sup>17)</sup> 첫째, 취업 우선 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기업의 조업 재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자리 안정을 위해 감세와 비용 절감,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기업의 부담 경감정책을 제시했다.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투자를 실시하도록 하고, 창업 투자 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지하도록 했으며 취업 경로 다양화를 지원하도록 했다. 둘째, 농민공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작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제로 농민공들이 작업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로 기차 등과 같은 교통수단을 동원해 농민공들이 작업

16) [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dongtaixinwen/buneyaowen/202001/t20200127\\_357746.html](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dongtaixinwen/buneyaowen/202001/t20200127_357746.html)

17)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0-03/20/content\\_5493574.htm](http://www.gov.cn/zhengce/content/2020-03/20/content_5493574.htm)

현장이 있는 도시로 이동하도록 했다.<sup>18)</sup> 셋째, 대졸자들을 위한 취업 채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들이 대졸자들을 고용하도록 장려하고 일회성 보조금 지급 정책도 실시한다. 후베이성(湖北省)과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은 지역의 대졸자들에게는 일회성 구직·창업 보조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넷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실업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업보험 지급 대상에게는 실업보험금을, 실업보험 지급 조건에 맞지 않는 실업보험 가입자에게는 실업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임시 공공근로도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했다. 다섯째, 직업훈련과 취업 서비스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으로 실업 등록, 취업 서비스 및 보조금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온라인 구직 서비스도 강화하도록 했다. 여섯째, 고용안정 업무 책임을 강화한다. 취업 보조금과 고용안정 보조금을 확대하고,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관련 규정과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리고 성(省)급에서 매달 실업률을 조사해 발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 고용 및 실업 문제에 정책적으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측 대책 발표뿐만 아니라 노사정 공동 발표도 이어졌다. 국무원 산하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와 중화전국총공회, 중국기업연합회, 중국기업가협회 및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는 2020년 2월 7일 공동으로 「코로나19 방역 기간 노동관계를 안정시키고 기업의 조업 재개를 지원하기 위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sup>19)</sup> 이 ‘의견’에서 코로나19 방역 기간 일부 기업들은 생산 및 경영상 다소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됐고 노동자들은 근로 대기, 실업, 소득 감소 등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노사관계는 더욱더 불안정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견’은 코로나19로 조업 재개 전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고용 및 임금 문제, 근로시간 조정, 작업 복귀 등의 문제에 대해 기업과 공회(노동조합)가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인해 직장에 출근하지 못한 경우 최대한 휴가 규정을 동원해 휴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된 휴가 사용을 초

18) 四川新聞網(2020.2.24), 「內江送1600餘名農民工返崗復產復工」, <http://nj.newssc.org/system/20200224/002871058.html>, 新華網山東(2020.3.11), 「促進復工復產 濟南推出“硬核”舉措接運農民工」, [http://www.sd.xinhuanet.com/sd/jn/2020-03/11/c\\_1125697374.htm](http://www.sd.xinhuanet.com/sd/jn/2020-03/11/c_1125697374.htm), 天眼新聞(2020.3.13), 「戰“疫”日記:政府“包火車”接農民工返崗——山東省復工復產農民工返濟專列“跟車記”」, <https://baijiahao.baidu.com/s?id=1661039009639761357&wfr=spider&for=pc> 등 보도 참조.

19)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02/08/content\\_5476137.htm](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02/08/content_5476137.htm)

과한 경우에는 임금 지급 관련 국가 규정을 참조해 노동자들과 협상해서 소득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리고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기업의 경우 공회 및 노동자 대표와의 협상을 통해 임금 지급을 연기해 기업의 자금순환 압박을 경감해주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격리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노동을 제공할 수 없었던 노동자들에게 기업은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격리가 끝난 후에도 치료로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실업보험 환급정책과 직업훈련 보조금 정책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제시하고 있고, 노사정 각 주체가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안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기간 동안 2020년 874만 명에 달하는 대졸자들의 취업난을 일정 정도 완화하기 위한 교육부의 발표도 이어졌다.<sup>20)</sup> 교육부는 온라인 구직시장을 확대할 것, '2020년 대졸자 전국 온라인 구직활동'을 전 부문이 합동으로 시행할 것, 온라인 고용 서비스를 최적화할 것, 대학원 석사과정 모집 규모를 확대할 것, 후베이성 등 주요 피해 지역에 대한 대졸자 고용 지원을 강화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중화전국총공회도 코로나19 기간 기업의 조업 재개 지원 및 노동관계 협조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sup>21)</sup> 이 통지에서 전국총공회는 각급 공회에 고용안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기업이 노동자에게 필요한 노동보호 조건을 제공하도록 협력하며,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 경영이 악화된 경우 전국총공회는 해당 기업 공회 및 노동자 대표가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임금 조정, 교대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의 방식으로 고용을 안정화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 ■ 맺음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역사상 유례없이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이 사회경제적인 충격에 직

20)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03/07/content\\_5488414.htm](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03/07/content_5488414.htm)

21) [http://www.gov.cn/xinwen/2020-03/03/content\\_5486420.htm](http://www.gov.cn/xinwen/2020-03/03/content_5486420.htm)

면하고 있다. 중국 역시 이러한 충격 앞에서 각급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 경제와 기업 활동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에 사회 각계에서도 호응하며 전 사회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총공회를 대표로 하는 노동계와 몇몇 기업 연합단체가 대표하는 경영계도 예외 없이 이에 호응하고 있다. 외부로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협력적 모습 이면의 구체적인 실제 현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중국의 상황은 적어도 사회 구성원 대부분에게 닥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이유로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한국경영자총협회<sup>22)</sup>와는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위기에 대응하는 경영계의 태도뿐만 아니라 정부의 방역 정책도 중국과 한국은 다소 달랐으나 전염병 위기가 초래한 사회경제 위기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중국은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고 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 **KLI**

22) 매일노동뉴스(2020.3.24), 「이 와중에 ‘쉬운 해고제’ 도입하자는 경총」,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722>